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 국제전기통신연합 2000년도 이사회



이용석

MIC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관

## 1. 회의 개요

으로 구성

1.1 회의명 : 국문 : 국제전기통신연합  
2000년도 이사회  
영문 : 2000 session of the  
Council of the ITU

1.5 회의 주요의제 : 이사회는 본회의와 2개  
분과위원회(재정 및 인사)로 구성되어  
진행  
가. 본회의

1.2 회의 기간 : 2000. 7. 19 - 7. 28

1.3 회의 장소 : 스위스 제네바

1.4 회의 참가자 현황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46개 이사국 대표단 및 회원국 옵서버 등 300여명이 참석
- 국내참가자 : 유영환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수석대표), 이용석 정보통신부 국제기구 담당관(교체수석) 및 전파 연구소,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한국통신, SK 텔레콤 등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업체 대표 7명

- 일반정책 및 전략 추진상황 점검
  -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TPF) 개최
  -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IS) 추진
  - 전략기획 워크숍 개최
- ITU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방안 논의
  - 표준기구의 설립문제 등 ITU의 구조개혁 방안 논의
  - 지역 참여 강화
- ITU 주관 회의의 개최일정 확정

나. 재정위원회

- 준회원(Associates)의 분담금 기준
- 1988/1999 재정운용 결과보고
- 일부 회원국의 분담금 경감 승인문제 논의

다. 인사위원회

- UN 공동시스템 하에서의 직무조건 변화
- ITU 직원 퇴직금 위원회의 회원 자격부여 등

2. 회의 주요내용

2.1 회의 진행

- 이사회는 본회의와 2개 분과위(재무, 인사)로 구성되어 총 50여개 의제를 논의하였음.
  - 재정과 예산 관련 의제는 재무위원회에서 ITU 직원 및 인사 관련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였음.
- 의장단 선출
  - 본회의 : 전임 Mrs. Shope-Mapole(남아공) 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임 부의장국인 필리핀 정부의 추천에 따라 필리핀 수석대표 Mrs. Catherine Heceta가 신임의장에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지역안배 관례에 따라 동부 유럽국가 순서가 되어 러시아 대표 Mr. Yuri Grin이 선출됨.
  - 재정위원회 : 의장/Mr. Bruce Gracie (캐나다)  
부의장/Mr. Frederic Rihel (스위스)
  - 인사위원회 : 의장/Mr. Gheorghe-Adrian Bocsan(루마니아)  
부의장/Mrs. Mette Konner (덴마크)

2.2 회의 결과

가. Yoshio Utsumi ITU 사무총장 개회사

- Utsumi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통신 환경이 자유화 심화, 민간 참여확대 등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ITU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걸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효과적 개혁 추진을 위하여 이사국들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환경변화 중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확산이 두드러진 변화로서 ITU는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기 위해 모든 ITU 권고문에 대해 무료온라인접속(free on-line access)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재정현황과 관련하여 Utsumi 사무총장은 인터넷 확산에 따른 신규 IT 사업자 증대로 ITU의 규모에도 변화를 가져와 지난 1년간 회원국은 188개국에서 189개국으로, 민간부문회원은 573개사에서 624개사로 확대되었다고 소개하면서 다만, 이와 같은 신규 사업자의 부문회원 가입확대로 수입이 지출예산을 초과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2000~2001 기간 동안 분담금 단위가 3.96% 감소하고 부문회원들이 분담금을 더 적게 부담하는 준회원(Associate member) 자격으로 지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사국들의 협조를 요청함.
- 한편, 최근 ITU가 주관한 “TELECOM 99”(99. 10월 제네바), “WRC-2000”(2000. 5월, 이스탄불) 등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전시회 참가 비용증가로 참여 희망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나. 표준화기구 설치 등 ITU 구조 및 기능의 개선

## (1) 사무국 보고

- 사무국은 ITU 내부 3대 조직인 개발국(Development Bureau), 표준화국(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및 전파통신국(Radiocommunication Bureau) 기능 개편방향 검토내용을 보고하고 특히 표준화국과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자유화, 경쟁적인 민간 표준기구의 등장, 기술발전 등)는 표준화국의 존재 자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 부문회원의 권한 확대와 나아가 ITU 내에 별도의 표준화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을 제기함.
- 한편, 사무총장은 ITU의 역할, ITU 회의와 정책 결정과정, ITU의 재정적 기반 및 사무국의 운영부분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ITU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거론함.

첫번째로 IT기술의 융합,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신규사업자 및 서비스의 등장, 독립적 규제기관의 설립 등 통신분야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 민간부문과 규제기관의 비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ITU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질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립적 규제기관의 등장과 함께 기술이전보다는 규제정책 관련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발부문의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두번째로는 ITU가 다루는 의제가 너무 과중하며 전통적으로 컨센서스에 기초한 ITU의 정책결정 과정으로 인해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문제가 부분적으로 밖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통신기술의 발전과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게 ITU의 정책결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세번째로는 ITU의 재정은 자발적인 분담금 선택과 분담금 단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도입된 비용회수(cost recovery) 원칙과

방법이 신규수입의 창출 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수입기반(분담금)을 흔들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부문 회원들이 국내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자금여유가 없음을 이유로 분담금 규모를 경감시켜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며 또한 비용집행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 비용회수 수입을 포함시킴으로써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요에 부응하여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함.

한편, 사무국의 구조도 선출직 국장을 장으로 하는 개별국(Bureau)들간의 협력 및 조정의 부재로 ITU 전반에 걸친 공통업무의 효과적 추진이 어려우며 3개국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어느 국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회원국들의 수요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거나 one-stop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사무총장은 총체적으로 ITU의 예산 및 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있어 민간 부문회원의 비중이 증가되어야 하며, ITU 활동은 새로이 설립되고 있는 규제기관 관련 회원국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2) 주요 논의내용

- 사무총장의 민간부문 권한강화 필요성 제기에 대하여 모로코를 비롯한 아프리카 개도국 등은 ITU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은 환영하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부문 회원과 그러하지 않은 민간회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협의를 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특히 부문별 활동과 관련, 전파 부문은 선진국 기업들의 독무대인 범세계적 서비스용 주파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기타 회원국들이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회원국 정부가 대부분의 분담금(80%)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민간부문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3) 표준화기구 설치문제

#### ○ 배경

-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통신의 민영화에 따라 IMT-2000, 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에서 ITU를 배제한 민간주도의 표준화가 진전됨에 따라 ITU는 최근 표준분야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산하에 특별작업반(AHG1: Ad hoc group 1)을 구성하여 별도의 표준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해 옴.

○ 동 문제는 이사회 직후이어서 개최된 제1차 특별작업반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크게 2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짐.

- 유럽국가 등은 혁신적 표준화기구의 신규 설립을 지지하면서 민간에 정부와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유럽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기구의 신설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반해 민간 발언권 강화시 정부대표의 입지 약화를 우려하는 개도국 및 일본, 중국 등은 급진적인 조직개혁에 반대하면서 ITU 표준화 조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자고 주장함.
- 한편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은 정부주도의 ITU보다는 시장에 의해 표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ITU는 동문제를 향후 10월 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 총회와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2차 특별작업반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다.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

### (1) 배경

○ '98 전권위원회는 이사회에게 UN경제사회 이사회(ECOSOC)가 2003년도 개최를 제외한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와 관련하여 WSIS 개최의 실현가능성 및 ITU의 주도적 추진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작년 한 해동안 수행해 온 검토결과를 보고함.

- 동 보고에서 사무총장은 WSIS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 주제·시기·장소의 신중한 선택, 최고위급 대표의 참석 등이 요구되며, 3일간 회의 개최시 소요예산은 대략 398만 \$으로 예상(개최국이 제공할 서비스 관련 예산은 제외) 된다고 하면서 범세계적 정보사회 추진관련 ITU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TU가 WSIS 개최에 결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역설함.

### (2) 주요 논의내용

- 이와 같은 사무총장의 보고에 대해 미국 등은 이사회가 WSIS 개최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많은 이사국들은 WSIS의 개최를 지지하였으며 튀니지, 브라질, 중국 등은 회의 개최의사까지 표명함.
- 결국 사무국이 정상회의 주제와 목표, 기대효과, 시기 및 장소,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을 차기이사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WSIS 개최의 주도적 참여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차기 이사회에서 내리기로 함.

## 라. 세계 전기통신 정책 포럼(WPTF) 개최

- 이사회는 변화하는 전기통신 환경 및 새로운 서비스 등장 등에 대한 회원국간 정책

추진동향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제네바에서 2001. 3. 7~9일간 세계전기통신 정책 포럼을 개최하기로 함.

- 포럼 주제로 사무국은 IP Telephony와 IMT-2000 두가지를 제안하였는 바, 회의 도중 미국이 인적자원 개발문제(Human Resources Development & Emerging Technology in Telecommunications Sector)를 추가 제안함으로써 어느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짐.
-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정책 이슈 논의 및 정보교환이라는 WTPF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는 IP Telephony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IMT-2000은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나 WRC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으로서 WTPF의 주제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별도의 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HRD 문제도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CD), ITU Center of Excellence를 포함하여 ITU 개발부문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논의의 장이 있음을 감안, 포럼 주제는 IT Telephony로하기로 결정함.
- 그리고 세부 주제는 IP Telephony 관련 정책·규제 이슈,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부문회원국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하되 미국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인력자원 개발 이슈도 세부 주제안에 포함시키기로 함.

#### 마. 전략기획 워크숍(Strategic Planning Workshops) 추진

##### (1) 배경

- 전기통신 분야의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ITU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99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전기통신분야 이슈에 대해 ITU가 지향해야 할 규제 및 정책방향 수립

을 위한 전략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현재까지 2차례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는 바, 1차 워크숍은 전자서명 및 인증문제를 주제로 하여 99. 12. 9~10일간 제네바에서 회원국 정부, 민간기업, 연구소 등 전문가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최되었고 2차 워크숍은 IP Telephony를 주제로 하여 2000. 6. 14~16일간 제네바에서 회원국 정부, 통신사업자, 민간기업, 연구소 등 전문가 345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최되었으며, 금년 9월 중에 유무선 서비스간 연결에 관한 3차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음.

##### (2) 주요 논의내용

-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사무국이 선정한 '전자서명 및 인증'과 'IP Telephony'라는 주제의 시의 적절성에 동의하고 이와 같은 워크숍 개최를 적극 지지하였음.
- 특히 전자서명 및 인증과 관련하여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회원국이 아닌 남아공, 가봉, 말리, 세네갈 등 개발도상국가들은 자국내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로서는 오직 ITU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ITU가 개도국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나 전자서명 및 인증 워크숍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사무총장에게 워크숍에 참가한 전문가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체 회원국과 민간부문 회원 또는 이사국들로부터 의견수렴 없이 사무총장 임의대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함.
- 이에 따라 전기통신 분야에서 ITU가 21세기에도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모든 이사국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다만 사무국이 향후 전략기획 워크숍 추진시 절차의 투명성과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함.

#### 바. 준회원(Associates)의 분담금 기준 및 북한의 분담금 경감 승인

##### (1) 배경

- '98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 회의에서는 분담금이 부담이 되어 부문회원이 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분담금을 적절히 하향, 조정된 준회원 제도를 도입함.
- 이번 이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준회원의 분담금 수준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였는 바, 표준화 부문(ITU-T), 전파 부문(ITU-R)과 개발 부문(ITU-D)은 성격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2) 주요 결정내용

- 현재 ITU-T, R의 민간 부문회원의 최소 분담단위는 회원국 최소 분담단위 63,000 Sf의 1/2인 31,500 Sf임에 따라 준회원 최소 분담단위는 부문회원 최소 분담단위의 1/3인 10,500 Sf으로 하고 ITU-D의 경우, 개도국 부문회원의 최소 분담단위는 ITU-T, R 회원국 최소 분담 단위의 1/8, 최빈 개도국은 1/16인 바, 준회원 최소 분담단위는 이의 1/3, 즉 개도국 준회원의 경우 2,626 Sf, 최빈 개도국 준회원은 1,313 Sf으로 하기로 함.
- 한편, 최근 자연재해 등 경제적 사정으로 ITU 분담금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왔던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지발언에 힘입어 ITU 헌장 관련 규정에 따라 ITU에 지불하는 분담금을 1/4단위(약 5,300만원)에서 1/8단위(약

2,660만원)으로 경감받을 수 있게 됨.

#### 사. '99 TELECOM 행사 결과보고

- 사무총장은 '99년도 TELECOM 행사이익은 당초 500만 Sf 정도를 예상했으나, 비록 감사(audit) 이전 잠정 집계된 금액이기는 하나 약 2,400만 Sf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최빈국 개발프로젝트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나 TELECOM 행사참가와 관련, 일부 주요 참가업체들이 소요비용에 비하여 성과가 작다는 이유로 향후 행사참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TELECOM 행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함.
- 이와 함께 90년대 들어 행사 참가사 수가 한계점에 달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참가사 확보 및 행사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2003년과 2007년 행사 준비와 관련, 보다 투명한 절차도입 및 행사개선을 위해 5인으로 구성된 기존의 TELECOM 위원회를 약20명 정도의 새로운 위원회(산업계, 개발도상국 등 관련자 포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 여성지위 향상(Gender Perspective) 문제

- 사무국은 '98 전권이사회 결의와 '98 세계 전기통신개발회의 결의에서 ITU의 모든 부문, 특히 개발부문에서 여성참여 및 지위향상 이슈를 포함시키게 됨에 따라 '99 년도에 수행한 작업에 대해 보고함. 이에 대해 이사국들은 여성 지위향상 노력과 관련 ITU의 활동을 치하하고 ITU의 고위직 및 참가 대표단에 여성 참여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3. ITU 관련 차기회의 일정

- 이사회는 향후 ITU 관련회의 및 행사의 개최시기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2001년도 이사회 : 2001. 6. 18~29, 스위스 제네바
  - 2002 전권위원회 : 2002. 9. 23~10. 18(4주), 모로코 마라케쉬
  - 2002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 1998년 WTDC에서 2002 WTDC 개최를 제안했던 트리니다드토바고가 개최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금번 이사회 이후 서면협의를 통하여 2002 WTDC의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기로 함.
  - WRC-2003 : 베네수엘라가 자국 개최를 잠정 제안하였는 바, 2001년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기로 함.

### 4. 참가소감 및 국내 대응방향

- 이번 이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의제는 ITU 표준 조직의 개혁문제로서 민간부문의 권한강화를 두고 선·후진국간 입장이 대립됨.
  -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하에서 ITU는 내부적으로는 회원기반의 약화, 외부적으로는 민간 표준관련 조직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내부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사무총장은 개혁의 방향을 독립규제기관의 증가에 따른 회원국 수요변화의 수용, 부문회원의 권한강화를 통한 불만의 해소, 사무국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으며 대다수 선진국들은 주요 쟁점간의 이견은 있으나 대체로 이와 같은 방향에 동조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세계 통신환경 변화를 수용한 ITU의 개혁 보다는 민간부문의 권한강화에 따른 선진국 중심의 ITU 운영과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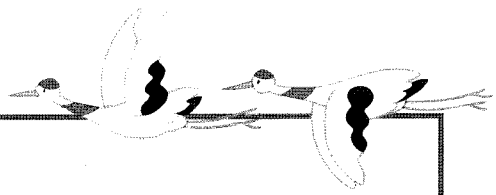
따른 개도국의 상대적 입지약화에 대한 우려감을 심각히 표명함.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ITU 개혁의 주요 쟁점인 규제기관의 참여확대, ITU표준 분야의 개편, 부문회원의 권한강화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정립한 후, 금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인 ITU개혁작업반(WGR) 회의에 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민간회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금번 이사회에서 '준회원' 제도가 도입되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 급증에 따라 부문 회원이 증가하는 등 향후 ITU 활동에서 민간회원의 권한강화가 예상되고 있는 바, 우리 나라의 경우 부문회원이 KT, SKT 등 대규모 사업자를 위주로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 우리 나라 민간기업의 ITU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ITU를 통한 정보·기술 공유 및 마케팅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ITU는 부문 및 자문그룹, 작업반에서 민간부문의 활동이 활발하나, 우리나라는 참여가 저조하며 국내업체가 부문회원 자격으로 적극 참여할 경우에는 국내업체의 이익과 동시에 한국의 입장이 ITU의 활동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ITU가 IP Telephony를 주제로 2001년 3월에 개최하고자 하는 제3차 전기통신 정책포럼(WTPF)은 종래 전기통신 기술 분야에 치우쳤던 ITU활동을 정책·규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서 향후 ITU활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부와 함께 민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또한 2000년 후반기부터 2003년 세계전과회의(WRC)까지 많은 ITU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바, 각 개별회의는 고유의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 ITU의 회의 및 이벤트 참여에 관한 국내 민·관 합동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전권위원회(2002, 이사국 선거), 세

계전과회의(2003),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2003) 등에서 다루어질 의제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장을 수립,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익을 도모토록 해야 할 것임.



###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정책 방향 확정

정부는 구조개혁 마무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6% 안팎의 적정성장을 이끌어내기로 하고 지식기반경제 확충, 남북경협 기반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창출을 위해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올해말까지 끝내는 것을 비롯해 전국 모든 초, 중, 고교에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고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 통합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영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정 2기를 3단계로 나눠 내년 2월까지의 기업, 금융 부문 잠재부실처리 등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경협과 관련, 정부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 등 실질적 경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디지털금융 등 사이버시대로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지식기반경제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2003년까지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에 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1년말까지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시범산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미국 등에 정보기술(IT) 등 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단계인 2003년까지는 광케이블, 위성,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등을 활용한 유무선 복합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 벤처기업과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민간중심으로 조성하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일본 등 외국의 첨단 부품, 소재 업체를 유치하고 부품,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전통산업의 IT화, 기업간 협력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하고 섬유, 유통,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별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1단계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방안을 마련, 오는 2002년부터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 분야의 국가표준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과 정보화투자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단계로 기초연구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로열티의 15% 정도를 주는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를 확대하며 3단계로 2002년까지 정부의 R&D 투자금액을 예산의 5%(올해 4.1%)로 높이는 한편 바이오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개의 과학연구센터 및 공학연구센터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비메모리 설계기술,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광고환 소자 등 미래 유망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